

정보운동 액트온 | ActOn

“해적왕, 안녕”

– 아멜리아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통권 제11호 | 2010년 제4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좌), 박명훈(우) 활동가가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에 결합해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된다. 내부에서만 열리는 자동문 시스템인줄 몰랐던 두 활동가는 여유있게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고, 외부에 고립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후 이 둘의 운명을 짚 이가 있었으니.... (2010. 11. 12 자정 무렵)


코드 : power

2010년, 수천 수만의 문장들,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여는 집회, 많은 이야기와 손짓과 웃음과 탄식들이 오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새로운 소통의 양식으로 삼아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열풍을 빼 놓을 수 없겠죠. 한편으로는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태부터 11월 23일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긴장이 우리 눈 앞에 가시화된 형태로 드러난 섬뜩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사람들은 평화를, 노동자의 권리를,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 하며 서로 만나고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 해안 포격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연대의 소식들을 앗아갔습니다. 물리적인 힘과 그에 비롯한 전쟁의 긴장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우리의 덮쳐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절망속에 계속 분신했고 전기도 물도 끊긴 수많은 철거투쟁장, 공장들은 오늘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이들의 직접적인 행사는 우리에게 무기력함을 안겨줍니다. 이는 오직 군사적 행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가를 폭행한 정규직, "한 대에 100만원"이라 하며 계획적으로 50대 노동자를 알루미늄 배트로 폭행한 기업체 사장,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과 전기를 끊어버리는 기업체와 관공서 등 힘을 지녔다는 이들의 폭력과 오만 앞에 우리는 절규합니다.

권력과 힘은 둘 다 영어로는 power, 독어로는 Macht 입니다. 수 많은 국가가 힘과 권력을 분리하고 그것의 운영주체를 따로이 두는 것은 그 둘이 하나이던 시기로 야만의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투쟁과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야만과 폭력이 횡횡하는 시기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laron : @picotera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저는 정보운동 ActOn의 편집장에서 물러납니다.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ActOn

통권 제11호 | 2010년 제4호

발행일 2010년 12월 20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라론

편집 라론

사진 빼트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picotera@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g

차례

통권 11호 | 2010년 제4호

“해적왕, 안녕”

– 아멜리아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Section 001. “해적왕, 안녕”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쇼 속기록 ... 08

Section 010. 기고 글 모음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장여경** ... 30

기지국 수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정민경** ... 35

젊은 해적, 아멜리아가 던진 질문들 **오병일** ... 38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들 **오병일** ... 43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문화 **정민경** ... 47

Section 011.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지지 단체 방문!	... 53
진보넷 후원의 밤, 참 잘 했어요	... 55
2011년 운동 달력 사세요	... 61
미세마을에서 온, 고민 많은 고구마!!	... 64



Section 001. “해적왕, 안녕”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쇼 속기록 ... 08

일 오후4시 서울 마포구 성마사
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쇼 속기록

편집자 : 본 속기록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열린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쇼¹에서 나온 발언의 속기록입니다. 기본 속기는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박명훈 활동가가, 녹취는 강진원 활동가가, 최종 감수 및 마무리 녹취는 오병일 활동가가 해 주었습니다.

김명준(이하 김) : 저는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의 김명준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멜리아씨는 조금 있다 소개하겠지만, 인사를 같이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섭(이하 남) : 남희섭이라 하고,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활동을 하고있고, 변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아멜리아와 한EU FTA관련 이야기를 하다 연결이 되어, 이번에 초대해서 해적당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멜리아(이하 아) :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입니다. 저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으로 유럽의

1 <http://pirateparty.kr/blog/?p=66> 에서 행사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회 의원입니다. 저는 유럽 차원에서 무역협정이나 저작권, 특히, 모바일 산업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이슈를 포함한 정보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통제 이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제 활동과 관련하여 얘기를 하게될 것 같습니다.

김 : 간단하게 소개를 했구요, 여러분들 소개도 하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주로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준비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만 해도 세 시간 갈수도 있겠네요. 그렇긴한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아멜리아씨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충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얘기의 흐름이 먼저 처음에는 아멜리아가 소속되어 있는 해적당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좀 더 역사적인 맥락,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는지로 옮겨가다가, 구체적으로 현재 해적당의 정책이나 조직구조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로는 저작권, 특히, 프라이버시, 정보통신산업 이슈들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아멜리아씨가 소개해주었습니다만, 해적당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쇼. 좌로부터 김명준, 아멜리아, 남희섭

아 : 스웨덴 해적당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는 법안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2006년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2006년 스웨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때는 의석을 얻지 못했구요, 2009년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는 2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해적당은 지적재산권 법안이나 디지털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정보 관리(information management)에 대응하여 활동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활동가 단체를 통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전자개척자재단(EFF)와 같은 단체들이죠. 그것은

199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 정당을 만들어 의회에 진출하여 의회 자체에, 또한 주로는 국가적인 미디어나 국가적인 정치 토론장 내의 정치 토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웨덴 해적당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적당이 아직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정책이 스웨덴 내 미디어를 통해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이슈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 : 간단하게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차례 선거가 있었고 유럽연합에서 2석을 갖고 계신데, 해적당이 처음 시작 한 과정,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지재권 문제를 비롯한 디지털 이슈에 초점을 맞춘 정당운동을 준비했던 초기의 주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 인가요?

아 : 해적당은 릭 폭빈지(Rickard Falkvinge)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스웨덴의 IT 사업가였습니다. 2006년 새해 전날인 2005년 저녁에 그는 디지털 환경에서 해적질을 합법화하기 위해 해적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설립할 거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그가 만든 페이지는 24시간 안에 백만에 달하는 접속을 기록했고, 국내 미디어들도 그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고 활동가와 당원들이 들어왔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6년 4월에 참여했습니다. 해적당이 설립된 후 4개월 후에 들어온 것이죠.

김 : 처음에 기업가가 시작한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한 여러 사건이 생겼을 때 활동했던 단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단체들이 정당을 준비하면서 했던 역할이 있었는지요?

아 : 물론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2003년부터 이미 파이럿 뷰로(Piratbyran, The Pirate Bureau)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들은 스웨덴 내에서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ISPI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인 해적질 단속 사무국(anti-piracy bureau)에 대응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파이럿 뷰라는 해적질이 나쁘다는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문화적 경험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해적질이 원래 나쁘냐는 것이지요. 그들은 저작권 논쟁을 주도적으로 제기했고, 또한 스웨덴 내의 자유로운 정보기반(infrastructure)이나 특허,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들 것인가 열려지게 만들 것인가 등을 다뤘습니다. 2004~2005년 경에 블로킹(blocking) 혹은 검열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웨덴에서 아동 포르노를 필터링하기 위한 DNS 블로킹을 도입하려 했기 때문인데, 기술적으로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법적 결함이 있어서 ISP들은 사실상 그것을 채택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차단 목록이 유출되었는데, 12.5%만이 실제 불법적인 사이트였습니다. 즉, 블로킹된 거의 90%의 웹사이트가 일반적인 포르노나 완전히 관계없는 콘텐츠와 같이 전혀 불법적이지 않은 것이었죠. 그것은 우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그룹들이 해적당 설립에 기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 지금 파이럿 뷰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본격적인 정책에 대해 얘기하기 앞서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할지 알고 가면 좋을 듯 한데요. 2006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당이 시작했고, 5월 31에 파이럿 베이 서버가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파이럿 뷰로와 파이럿 베이,

그리고 해적당이 어떤 관계인지, 공식적인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 파이럿 뷰로는 2002, 2003년에 해적행위 단속사무소(Anti-piracy bureau)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구요. 파이럿 베이(The Pirate Bay, 비트토렌트 방식의 세계 최대의 P2P 파일 공유 사이트)는 파이럿 뷰로의 실험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콘텐츠를 공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적당은 파이럿 베이이 설립된 2~3년 뒤인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간에 조직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이럿 뷰로에 있는 사람들이 해적당을 이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파이럿 베이 프로젝트에 있던 사람들도 정당에 관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적당 당원들이 해적당 창당 이전에 파이럿 뷰로와 파이럿 베이의 지지자였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여기서 또 이해해야 할 것은 해적당이 지난 4년간 거둔 성공의 대부분은 파이럿 베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파이럿 베이 서버가 경찰에 습격당했을 때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았고, 많은 당원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럿 베이의 첫 판결이 우연히도 2009년 4월 17일에 나왔는데, 유럽의회 선거 6주 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저희가 당선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 그럼, 정당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보지요. '해적당'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도전적인 이름 아닙니까? 기업이나 국가가 해적행위라고 공격하는 이름을 그대로 써서 정당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써서 정당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기존 정당에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압박을 넣는 대신에 독자 정당의 길을 선택했는가가 궁금합니다.

아 : 왜 해적당이라고 했느냐? 저는 누구도 '해적'이 되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이나 유럽의 국민 누구라도 해적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이 갑자기 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상한 것인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 기술을 사용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해적당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것 역시 거의 가능하지 않구요. 지적재산권을 위반하지 않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왜 정당인가? 민주주의에서 의회 정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권력자들을 미디어나 공론장으로 끌어들이어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활동가들은 그러한 것을 성공적으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내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확실히 그 이전보다 활동가들이 이러한 이슈를 공론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 : 그러면 해적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존 정당들의 정보통신정책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컸던 것인가요, 아니면 일정하게 기존 정당들이 해적당의 입장과 유사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정당의 형식으로 의회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던 것인가요?

아 : 물론 정보통신 관련 정책과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논의를 형성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과 유럽의 정보 정책 논의들은 여전히 별개의 관점을 요구했고, 그것이 정치 정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의 정당들은 이와 관련된 이슈들 논의를 시작 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나아갔지만, 어떤 통일된 시각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적당 이외의 어떤 다른 정당도 정보사회와 관련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녹색당의 일부 사람들도 온라인 저작권에 대해 얘기는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영향, 유럽 국가간의 기지국이나 로밍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녹색당의 누구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과도한 특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바 없습니다. 이는 유럽차원의 반도체 산업의 문제인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특허 제도는 가치측면에서 불안정 했는데, 아직 누구도 의심스러운 특허 조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해적당은 정보사회의 모든 측면에 대해 일관되게 언급하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 기존 정당의 입장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 : 제가 오늘 역할이 깎두기라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재권에 대한 시민사회영역은 최근에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형성되기 이전에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거든요. 세계무역기구 내의 지재권에 대한 협정이 있는데, 트립스(TRIPs)라고 하는데, 그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 1995년입니다. 이 협정에 관한 논의를 처음 시작했던 것은 다국적 기업들인데, 그게 70년대 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지재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라는 UN 차원에서 지재권을 다루는 전문기구가 있는데요. WIPO에서 디지털 의제라고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든 것이 96년입니다. 그 후에 시민사회 진영에서 지재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계기가 사실 에이즈 특허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특허와 연결시키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서서히 시민사회단체가 지재권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규율을 만드는 집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시작되었죠.

김 : 지재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응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주셨습니다. 해적당의 정강, 정책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세 차례의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두 차례의 (스웨덴) 총선과 EU선거인데, 하나 궁금했던 것이 EU에서는 의석을 얻었는데 국내 총선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선거 제도상의 차이 문제인지, EU선거와 스웨덴 국내 선거를 대할 때 스웨덴 국민 내부의 선거에 대한 접근의 차이에 의해 그런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아 :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총선 때에는 호응을 얻을만한 이벤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스웨덴 국민들은 자국 선거에서는 큰 정당에 투표를 하고, EU 선거에서는 소규모 정당에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같은 경향을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문과 TV와 같은 언론에서도 EU 선거 때에는 국내 총선 때보다 작은 정당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국내 총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정당이 관심을 얻기 힘들구요.

김 : 그럼, 정책 얘기로 들어가보죠. 해적당 정책 중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겠

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주시요.

아 : 지금 해적당은 저작권 및 여타 지재권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을 재평가하는 중입니다. 이는 정당의 자연스러운 정책 개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2006 이후 정치 상황도 달라지고, 정당 지지자도 변화했습니다. 스웨덴 내의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에 대한 논쟁도 성숙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적당 또한 입장을 바꿔가는 중이구요. 미래 저작권에 대한 저의 주된 희망은 그 어떠한 정당도 저작권이 정보 관리의 혁신이나 창의적인 영역을 저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저작권 정책은 예술가들에게 수익의 제공하거나 창의적인 콘텐츠를 배포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기반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작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와 같은 경제적 모델로서의 저작권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먼트 (Micro payment) 시스템, 스트리밍 서비스, 매그너툼(www.magnatune.com)이나 자멘도(www.jamendo.com)와 같은 선물경제 (gift economy)에 기반한, 레이블과의 새로운 계약방식, 권리에 기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악을 사는 것 등... 불행하게도 정부나 의회가 밀고 있는 많은 저작권 정책들은 80년대의 모델에 기반하여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에 반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건설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창조적인 산업은 창조적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저작권을 보는 관점이구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얼마어야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작권이 창조적인 활동과 산업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 해적당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성미산 마을극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김 : 창조적인 활동과 새로운 기술의 성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U차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정책적 쟁점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적복제 단속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U의회에 대해 해적당이 개입해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법적, 제도적 성과를 내려 하는 것이지요?

아 : EU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구금형에 처하거나, 매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말도 안되는 보상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이릿 베이는 저작권 침해로 추정되는 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3억 10만 유로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23개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설비를 제공했다는 것죠. 그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를 막도록 하려고 합니다. ISP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하는 것이죠. 해적당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모든 온라인 복제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의한 모든 온라인 복제는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저작권과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러기를 바라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사회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인들은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의 가치는 저작권 존중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저작권의 제한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김 :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 : 그렇습니다.

김 : 간단하게 대답하셔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 온라인 상의 지적재산권의 문제에서 주로 복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복제 후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과정이 연결되어 있을텐데요. 해적당의 입장은 그 활용 과정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CC처럼 대안적 체계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 : 제가 보기에, 스웨덴에서 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저작물)에게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비용을 지불합니까. 당신은 이미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컴퓨터에도 비용이 지불했는데, MP3 파일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해적당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는 세르비아에서 만든 것인데, 세르비아에는 상업적인 해적행위가 흔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토마토를 파는 야채가게, 햄스터파는 노인, 많은 불법복제 CD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계란.. 이런 것들이 거리의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에서는 서구의 문화를 접하기가 힘듭니다. 세르비아의 불법 음반가게에 가면 불법복제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완전히 도덕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세르비아에서는 이러한 저작물들이 배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르비아는 EU 회원국도 아니고 10년 전에 폭격을 당한 적도 있고.. 조금 특수한 경우이죠. 스웨덴, 한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있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256K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야채행상 옆에 있는 불법복제 CD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무료로, 편리하게 당신

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할 때에는 콘서트에 갈 수도 있구요. 현재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라이브 공연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규모 라이브 콘서트가 현재처럼 많았던 적이 없는데, 모두 좋은 가격에 매진되고 있습니다.

김 : 이야기가 길어 질 수 있는 주제인데요. 저작권 이슈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 할 때, 해적당이 4년이 되어 정책변화 시기가 되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책 재검토의 초점 이슈는 무엇인가요? 4년 전의 정책들을 바꾸는 주요한 내용, 예를 들어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완전한 허용,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 등의 이슈들이 있어왔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이 이것보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지재권이라는 개념을 온라인상에서 폐기하는 것이 맞다는 토론이 있는 것인지. 논오되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가요?

아 : 저는 개인적으로 지재권의 완전 폐지를 지지한다. 4년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때부터, 사적 복제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온라인 파일공유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4년 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는 스웨덴 해적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46개국에 해적당이 있는데, 모든 이슈에 대해 해적당의 관점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웨덴 해적당 내에서 정치적 토론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전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 영역이 효과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효과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기반하는 것보다는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모델(non-rights model)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작 영역에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모델을 적용한다면, 저작권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작권법이 있든 없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저작권은 관계없어지는 것이죠.

남 : 원래 지재권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제가 가장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더 과격한 사람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을 폐기해야 된다, 특허제도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두 가지가 따라붙는데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형도 봐야하고, 실제 실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과 특허권에 기대있는 산업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폐지하자면 구체적으로는 트립스(Trips)협정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럼 WTO 협정을 깨야하거든요. 그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EU만 하더라도 저작권 관련 지침이 10개 가까이 되는데요. 유럽의회 의원이 750명인데 해적당 의원이 2명이잖아요. 그 2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관철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듣고싶네요.

아 : 이것은 굳이 저작권을 폐지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작권이나 EU 내의 10개 지침들을 몰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지침들이 창작 영역이 미래에 만들 사업 모델에 장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창작 영역은 저작권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업모델을 혁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에코시스템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창작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창조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5명의 소수가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적 환경을 변화시키자'는 쪽으로 이러한 논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 : 정치적인 전략 부분은 좀 있다 정리를 해보기로 하구요. 다른 정당과의 관계문제도 있고,

국내정치와 EU 차원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해적당의 입장에 대해, 물론 현재 토론중이기는 해서 어떻게 정리될 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적 영역에서 기업들은 해적당을 싫어하겠지만, 그 산업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적당을 보는지?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거대 미디어 기업 내부의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독립적인 제작자들이 있을텐데, 크게 두 영역의 창조 영역의 계층이 해적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 창조적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저작권 보유자입니다. 저작권 보유자들은 반드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작권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해적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적당이 그들의 수익원인 저작권을 없애고자 하기 때문이죠. 실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해적당에 대해 단일하게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술가들이나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배분하는 환경이 20년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예술가나 소규모 예술가들은 해적당의 생각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수익이 큰 편에 속하거나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은 해적당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트니 러브와 같은 예외도 있는데, 그는 2004, 5년에 음반사와 레이블들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디 가가가 이와 비슷하게 저작권 업계를 비난했는데, 그녀는 음악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였습니다. 라디오 헤드나 나인 인치 네일스 등은 작품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구요, 스웨덴에서 베이스헌터라는 밴드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집에서 혼자서 작업해서 공개를 해서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이며 그의 노래를 모든 클럽에서 여름 내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 지금 주로 음악 분야의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영상분야는 어떤가요?

아 :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영상제작자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영역의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드네요. 연구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TV 업계를 경우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가입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죠. 수익 모델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김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권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문들을 생각해 두시구요, 연결해서 특허의 문제로 들어가보죠. 해적당은 특허에 대해서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 그렇습니다.

김 : 뭐, 보충설명은 없나요? (웃음)

아 : 특허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초기에 좋은 아이디어였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매우 논쟁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는 소규모

혁신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배포나 판매 독점에 기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고위층이나 귀족들을 위한 것이죠. 특허제도는 19세기에는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에 의해서나 사회주의적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허제도는 인위적인 독점을 야기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지거나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김 : 지재권하고도 좀 비슷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들어 특허가 일정하게 의약품이 개발되고 공급되는데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재권이 없어졌을 때 창작자들이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의 문제와 유사하게, 특허가 없어졌을 때 그런 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에 있어서 좀 대안적인 방식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이 있습니까?

아 : 특허가 주된 수익원이 되거나 혁신을 촉진한다는 어떤 연구결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혁신에 대해 특허가 거의 기여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좀 예외적인데, 제약업계에서는 더 많은 제약업체가 특허에 호의적입니다. 제 생각에 그 주된 이유는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적당의 입장은 만일 임상시험에 회사가 수백만 유로를 부담해야 한다면, 국가 자신이 그러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반의 임상 시험이 된다면, 의약품 독점과 관련된 논란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제네릭 의약품 제약업체는 제네릭 의 pharm을 생산하여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약품 혁신은 대학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화이자, 존슨앤존슨, 로슈와 같은 대규모 제약업체의 사업 방식은 중소기업을 사들이고, 임상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김 :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주요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데이터 리텐션이나 전자여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가지 있을 수 있을텐데,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 : 일반적으로 정부나 의회가 정보 관련 입법을 할 때 그다지 사려깊지 못했습니다. 정보 경제에서 모든 것은 정보의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저로부터 세계로 흐르는 정보이고, 마찬가지로 세계는 제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말이 제게 정보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정치인들은 제가 어떤 정보를, 언제 줄 것인지에 대해 제게 적절한 통제권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 듯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저에 대한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정보 통제권(personal data autonomy)을 주장합니다. 제 개인정보는 저의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누구도 제 개인정보를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다소 추상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리텐션(data retention)은 내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오래동안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내용, 어디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해 국가가 파악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대중교통에 RFID 칩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 업체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라도 내가 어디에, 언제 갔는지, 혹은 어떤 장소에 정기적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 개인정보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제 개인정보는 저의 것이고, 어떻게 유통될지 제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다른 사람이 제 개인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비용 없이 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자율적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치적인 논

의가 아직 유럽에서도 발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 성숙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김 : 좀 더 각 이슈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저작권, 특허, 프라이버시 다음으로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아 : 통신분야는 지난 9개월 동안 내가 주력해온 분야 중 하나입니다. 통신 산업은 다른 모든 논쟁들의 기반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쉽게 교환하게 되었는가? 인터넷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러한 인프라가 민주주의적 참여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통신 영역은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 관점에서나, 인프라의 측면에서나.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ISP나 이동통신사는 누구와, 언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감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이용자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수집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리고 당신의 ISP 역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ISP는 지역의 권력입니다. 사실상 기술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통신 인프라가 규제되어야 함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는 더 이상 상업적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모든 수준에서의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입니다. 이를 사유화하는 것은 공기를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 : ISP 쪽을 강조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ISP의 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스웨덴에서도 ISP는 사기업인가요? 사기업에 대한 공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인프라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이 아닌, 뭔가 사회적인 성격의 다른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 : 스웨덴의 경우 통신사가 90년대 초반에 규제완화 되었습니다. 통신 산업은 국가 독점이었고, 여전히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웨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은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 인터넷 접속비용이 너무 비싸서 네트워크 사이에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럽의 일부 ISP는 시장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IP나 소비자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도이치 텔레콤의 경우 이용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스카이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도이치 텔레콤이 자신들의 가입자가 자사의 VoIP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스웨덴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경쟁 규제가 상당히 잘 되어왔었는데, 스웨덴 경쟁당국은 기존 통신 독점에 대해 몇 년동안 십여개의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 영역에서 훨씬 엄격한 경쟁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ISP의 개수는 매우 많으며, 모바일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예를 들어 망중립성 이슈가 영국, 독일, 스페인 등지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현재는, 제가 스웨덴 남부에서 작은 ISP 운영을 시작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기존의 국영 기업이 상호접속(peering)할 때 그 네트워크에의 포워딩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받을 때도 과금을 합니다. 보내는 트래픽과 받는 트래픽 모두에 대해서 과금이 되는 것이지요. 이중 과금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지배적 사업자가 이중으로 과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웨덴의 경쟁 법이 통신영역에서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ISP 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하기까지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 : 공정경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독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그것이 공공적인 재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ISP의 역할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통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통적으로 통신 분야에서만 역할을 하다가 이른바 미디어 컨버전스가 일어나면서 IPTV 서비스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통신 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나요? 즉, 이러한 통신 기업들이 거대화되고, 미디어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그렇다면, 공적 규제의 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이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아 :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에서는 ISP가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화, TV와 인터넷 접속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권한남용이거나 반경쟁적인 행위입니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관행을 바꾸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인터넷 접속과 TV 서비스를 같은 사업자로부터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국에서 Virgin 미디어는 또한 Sky라는 회사를 통해 통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상황도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기업이 서로 의존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경쟁 당국이 몇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로 하여금 시장을 구분하도록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모바일 영역에서 일

본은 좋은 사례인데요. 휴대폰의 경우 기지국 인프라가 있고 연결되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 통화, SMS 메시지, 벨소리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구체적으로 도쿄에서는 인프라 소유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는 세 개의 회사만이 기지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세 개의 회사로만 제한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쿄 전체가 기지국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는 너무 많은 전파가 떠다니고, 핸드폰이 작동하기 위해 수많은 기지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개 사업자만 기지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지국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기지국을 소유한 회사들이 기지국 소유와 서비스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분리함으로써 기지국을 소유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인프라의 남용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가 조금 유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도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룩셈부르크는 기지국 공유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지국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작고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저는 인프라를 공유하는 시스템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소유자에게 엄격한 요구조건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남용하여 다른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 하부구조를 소유하고 있는 독점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중점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이슈들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적당이 시작된 지 5년정도 되어가고,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도 정당구조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사회화 시키고 논쟁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적당이 국내에는 의석이 없고, EU에는 두 석을 가지고 있는데, 해적당이 정당이라면 정당의 활동이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적당이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이슈 이외에 다른 영역들, 환경이든 경제든 정치적인 구조든, 이런 이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을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고 지금 말한 디지털 환경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이것에 동의하는 세력과 연합하는 것을 주요 정치 활동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어 보도록 하지요.

아 :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현재 하고있는 활동만으로도 할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 이슈 등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독일 해적당의 경우에는 정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이나 원칙이 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이슈를 포괄할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체코, 세르비아의 해적당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해적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몇 개의 정치정당 사이에서 모든 다른 이슈 사이에서 우리 이슈를 가장 잘 협상할 수 있는 블록을 찾고자 합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우리는 녹색 그룹(Green Group)과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녹색 그룹에 속해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녹색 그룹과 협력하는 것은 그것이 행정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녹색 그룹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 : 녹색 계열 이외에 우익정당, 좌파정당으로 분리되는 정당들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한 사례가 있나요? 예를들어 시민당이나 기민당과 같이 좌우로 분류되는 정당들과 연합의 사례가 있습

니까?

아 :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가능한 넓게 연합합니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그룹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파, 극우파, 매우 급진적인 좌파, 사회민주주의자, 환경적 자유주의자 등과 협력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에서의 활동은 '외교 기관'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치보다는 외교에 가깝습니다. 짧게 답변하자면 '그렇다'입니다.

김 : 혹시 그런 연합과 관련된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까?

아 : 폭넓은 연합의 사례로는 올해 봄에 통과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대한 결의안이 있다. 781명의 유럽의회 의원 중 663명이 ACTA 협상의 투명성과 관련 문서의 공개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거의 모든 정치 그룹에서 연합에 참여했다. 그 결의안 채택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2~3주 정도 논의가 되었다. 그 결의안에 많은 정치 그룹이 참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올해 3월의 일이다.

김 : 외부와의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해적당의 규모는 어떻게 되죠? 당원의 규모라던가, 젊은층의 지지가 많을텐데 당원 중의 젊은 계층의 구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해적당의 구조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른 당과의 차이가 나는 점이 있나요?

아 : 이 역시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스웨덴의 경우, 해적당이 다른 정당과 다른 점은 수평적이라는 점입니다. 스웨덴 해적당에는 '3명의 해적 규칙(Three Pirate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명의 해적이 어떤 활동에 동의를 하고, 비용이 들지 않거나 스스로 부담할 경우에, 그것이 해적당이 다루는 주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활동의 기회를 만드는데, 그것은 수직적이지 않고 재미있어서 해적당 내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상력이 발휘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남부 스웨덴에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해적당의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엄청나게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정치 논쟁적인 글을 쓴다든가, 언론을 접촉한다든가, 영상을 찍는 등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때로는 정당의 중앙집중적인 방식이 선거 캠페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우리가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통일된 조직 대신에 각 지역의 공동체에 기반한 작은 단위로 운동을 한 것입니다. 활동적인 당원에게는 자신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기는 하겠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은 시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한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한 음향차를 빌리는데 예산의 반을 쓴 적이 있는데, 온 마을에서 다 들릴 정도로 사운드 시스템은 좋았지만, 비용 효율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8주 동안 커피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시내에 가서 커피, 비스킷과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인터넷 접속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대해 알렸습니다. 언젠가는 유럽의 소셜 포럼에 참여한 적도 있는데, 매우 재미가 있었습니다. 소셜 포럼 사람들과 방문자들이 파티도 열고..완전히 무질서한 이벤트였는데, 왔다갔다하며 강의도 열었다가 북 테이블도 가졌고...매우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재미있었어요.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에서 온 다른 동지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김 : 수평적 구조를 강조하셨구요. 수평적 구조에 대한 강조가 디지털 환경 이외의 이슈 중에

서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 정당의 자기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지금 설명하시면서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4월에 해적당 인터네셔널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정도로 활동하고 있는지?

아 : 해적당 인터네셔널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 출발했습니다. 전 세계에 해적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경험을 공유하고, 각 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누기 위한 것이었죠. 해적당 인터네셔널이 조직으로서 공식화된 것은 올해 봄인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싱크탱크와 같은 연구 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해적당의 활동이나 정책 개발을 돕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적당 인터네셔널의 주된 활동은 새로 설립되는 해적당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조직화를 위한 팁을 교환한다든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Three Pirate Rule'의 경우, 매우 성공적이었고 수평적인 신생 정당에게 효과적입니다. 독일, 카탈루냐, 체코, 스페인은 좋은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해적당 인터네셔널을 적극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각 조직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인지를 찾고, 직접 민주주의의 개발의 논의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해적당은 직접 민주주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적당 인터네셔널에 속해있기는 합니다.



▲ 2010년 10월 20일 고려대학교 세미나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에 참석한 아멜리아²

2 고려대학교 세미나의 녹취록 등은 <http://piratepartykr/blog/?p=22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 : 국제 네트워크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대강 전반적으로 다룰 만한 이슈들은 점검을 한 셈인데요. 좀 개인적인 얘기로 옮겨가서, 지금 설명을 들은 입장과 구조의 정당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까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연구를 몇 달간 해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요하게 어떤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하려 하는지 계획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 : 현재는 네트워킹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하거나 점심 파티에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서작업을 하지만, 이 역시 기록에 기반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투표는 의회 활동의 매우 작은 부분이구요, 대부분의 일은 올바른 정책 생산을 위해 연합을 형성하고 정치적인 토론에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회의를 하면서 보냅니다.

김 : 그렇게 회의하고 연합해야 하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아요?

아 : 해해해~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자유문화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유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들, 자유/오픈소스 운동(F/OSS) 활동가들... 최근 제가 만나길 좋아하는 그룹은 소규모 이동통신 서비스 혁신가들인데요. 1992년부터 GSM+1 표준이 어찌구, 어떻게 발전이 되었다는 등.. 30분, 1시간씩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김 : 적성에 맞는 것 같네요. 원래 남아있던 질문이, 이번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한국에는 어쨌든 해적당이 없지만 한국에서 해적당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 IT 관련해서는 발전해있고, 발전된 산업구조도 발달해있고 이슈도 많은 상황인데요. 바깥에서 보시기에 한국같은 곳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만일 그렇다면 해출만한 조언이 있는지요?

아 : 예, 한국에도 해적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해적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정보통신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안는 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해적당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 핸드폰에는 SIM 카드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여와 묶여져있는 핸드폰입니다. 애니콜에서 대여한 것이네요. 당신이 애니콜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 당신은 대여업체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통신 영역에서 경쟁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기존 정당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이와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사업자를 바꿀 때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핸드폰을 사게끔 만드는 것의 해악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토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적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번들링 제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을 섞어놓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반경쟁적이고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롭습니다. 또한 많은 권력을 카르텔이나 주요 업체에 집중시킵니다. 그들이 우리 통신 정책에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동통신 산업부터 건드리라는 것이 한국 해적당에 대한 제 조언입니다. (웃음)

김 : 이야기를 듣다가 든 생각이, 지난 2002년에 UN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디지털사회의 미래 비전을 UN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3자 구조로 해서 국가-기업-시민사회 영역이 있었는데, 시민사회영역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특정 이슈 조직들은 있었지만, 포괄적인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녹색당이 역할은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적당이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해적당이 있었으면, UN에서도 정당의 이름으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꼭 해적당이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 '해적'은 정말 훌륭한 홍보 수단입니다.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왜 해적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관심을 끄니다. 좋은 홍보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01년에 라임와이어나 카자를 사용할 때, 저를 해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해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보는 적도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듣고 싶을 뿐이었죠. 인터넷 세대들에게 인터넷의 모든 이용을 주장하는 것, 정보사회에서 공유하고, 배포하고, 리믹스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해적들이 미안했다'라며, 마치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80년대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해적이고, 우리가 옳다'라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해적이 되기를 선택했고, 해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위해 건설적인 것이며, 정보 경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적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김 : 질문은 이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 계속 했는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얘기하실 때 가능하면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자 : 장애인 신문 비마이너에서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수업을 들으려 해도 저작권 문제로 파일이 제공이 안된다든가, 영화를 볼 때도 화면 해설이 필요한데 많은 업체들이 저작권을 문제삼아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계에서는 여러 차례 인권위에 진정을 하지만 정부나 문화부는 기업의 손을 들어 주면서 저작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들의 문화향유와 저작권 문제의 충돌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해적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아 : 스웨덴은 강력한 사회복지 국가입니다. 장애인들의 권리가 저작권자의 권리와 충돌 할 경우 국가가 개입해서 장애인들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줍니다. 저는 그것이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 산업계가 자신의 저작물을 시청각 장애인에게 접근하도록 하는데에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저작권 산업의 수익 창출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저작권 산업은 탐욕적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한국에는 문화부가 있기에 이에 맞설 해적당이 필요합니다.

질문자 : 창작 산업에서 저작권 대신 자신들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보다 창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전공은 경영학인데요..그러한 대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아 :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한 바 있는데요. 소액 지불 시스템(아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이나 자멘도, 매그나툼과 같은 일종의 후원 시스템과 같은...그러나 저는 창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업계를 위해 사업 모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창작 산업의 일부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그들이 그러한 대안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소액지불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소액 금융을 창작 산업에 도입하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 환경이 창의적인 모델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 : 짧게 추가 질문을 하자면, 세계적으로 해적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예컨대 음악이나 영화 영역의 단체들의 참여 없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 누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인가요?) 많은 주요 이슈들이 미국에서 야기됩니다. 그래서 해적당 운동이 미국의 주체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 :사실 EU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경제가 크고, 소비자 시장이나 수출 시장도 더 큼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를 원한다면 EU를 통해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미국 대신에 유럽에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미도 있고, 인도나 중국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시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적권 보호 관행을 유지하겠지만, 우리가 '지적재산권은 엇먹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즘 누가 미국차를 원하니까? 아무도요. 좋지 않거든요. 그들이 수출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음악, 나쁜 특허들, 그리고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더 이상 신경쓰지 말고, 정보를 생산하는 더욱 생산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고 싶네요.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도 해적당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누군가 중국 해적당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환경은 1당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 정당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채널인 듯 합니다.

질문자 : 교육잡지 민들레에서 온 편집자입니다. 해적당과 관련없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굉장히 젊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고등학교때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태도로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웃음) 또 하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기 내부의 근원적 힘이 어디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보다 열정적이라는 것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분들도 열정적인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스웨덴의 해적당 청년 조직(youth organization)에서 약 2년 동안 국제 코디네이터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 통상협정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래서 (저를 초청한) 남희섭씨와도 만나게 된 것이구요. 2008년에 유럽

에서의 통신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EU 의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었구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 고등학교 때요? (웃음)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잡한 공식을 풀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그 당시 17살 때, 3~4일 동안 그냥 앉아서 4차 방정식을 풀려고 했었고 그것을 풀면 "그래! 이거야!" 하면서,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5개 연속으로 풀면 방에서 일어나 춤을 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풀었는지를 이야기 하면 친구들은 모범생이 아니냐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축구를 좋아해서 그들과는 달랐지만, 고등학교 때 경험은 즐거웠습니다.

질문자 : 고등학교 때의 어떤 경험이 현재를 있게 하셨나요?

아 : 전혀 관계없어요. (웃음)

김 : 고등학교때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간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 : 잠깐만요. 고등학교 때는 정치보다 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2006년 부터입니다. 13에서 15살쯤, 아마도 중학생 때 친구들 몇 명과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고, 의로나 보건등의 정책에 관심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같은...2006년 18살이 되었는데, 그즈음 해적당이 만들어졌고, 그때가 다시 정치적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국제 정보정책으로 빨려들어갔고, 해야할 일들이 많았죠. 원래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려 했고 1년 반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적당에의 참여가 늘어나서 상근 활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학생이 아니지만, 유럽의회 의원 임기가 끝나면 수학 학위를 따고 싶습니다.

질문자 : 미디어 오늘의 김수정 기자입니다. 언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보면 유료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읽을 때에도 비용을 지불해야만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언론사가 많거든요. 신문산업의 퇴조로 인해 언론사가 선택한 것이 유료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언론 환경에서는 해적당같은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언론기사 같은 경우 신문사가 저작권을 요구하면 안되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 예..저는 온라인 기사에 대해 미디어 업체가 과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미디어와 관련하여, 미디어의 몰락은 결국 자기의 책임입니다. 저는 최근에 오피니언 리더에 반대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95년 경 제가 어렸을 때, 국내 신문에 '토론 페이지'라는 1page의 오피니언 페이지가 있었고, 또한 매일 짧은 사설을 실었습니다. 2010년에 같은 신문을 열어보니 사설이 3페이지였고 매일 6~7명의 직원이 쓰고 있었습니다. 토론 페이지는 임의의 사람이 쓰는 한 페이

지와, 원고료를 받는 30명의 컬럼 리스트가 쓰는 여론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RSS 피드를 구독하면, 오피니언과 토론을 받아보게 됩니다. 국내 뉴스를 보고 싶은데요. 미안하지만, 당신들의 의견은 필요없습니다.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AP나 로이터와 같은 뉴스 서비스가 오피니언을 신지 않는다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 신문을 좋아합니다. 좋은 정보원이고 전 세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좋은 필터입니다. 블로그로부터는 그같은 정도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뉴스 생산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역할이 자신들의 '식견'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들의 식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정보와 데이터입니다.

질문자 : 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활동을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해적당이 인터넷 이용자들, 혹은 모바일 이용자와 관계맺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거나, 특히 당내 활동,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활용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아멜리아. 왼손잡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네요. :-)

아 : 해적당원들이 전부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자이고 스웨덴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 수 보다 휴대폰 수가 더 많습니다. 스웨덴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모델을 통해 전화선을 이용하거나 ADSL을 통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와 접촉하는 방법은 블로거 커뮤니티가 있고 트위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해적당 활동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커피를 마시며 만나거나 시위

를 하면서 만나거나 행사를 통해 만나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스웨덴에서 제가 있던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일요일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죠. 뉴스나 당의 소식,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매우 가치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5~6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25명 정도가 되었죠. 12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질문자 : 특허와 관련된 관심이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유럽 사이에 한EU FTA가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의회에서 FTA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거나 특허 제도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 현재의 정치적 논쟁을 보면, 아쉽게도 유럽의회에서 특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특허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혁신 산업, 독창적 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연구도 그들이 혁신을 위해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생태인터넷네셔널(KEI)과 같은 단체가 '프라이즈 펀드(Prize Fund)'라는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영역의 혁신을 위한 방안인데요, 예컨대, 말라리아 의약품의 개발을 위해 특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 이번 방문을 계기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으면 합니다. 여기 모인 이들도 새롭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참석해주어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ction 010. 기고글 모음

-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장여경 30
기지국 수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 정민경 35
젊은 해적, 아멜리아가 던진 질문들 ... 오병일 38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들 ... 오병일 43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문화 ... 정민경 47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바야흐로 21세기는 개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개인들의 자기 주장이 강한 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국가가 일련번호를 찍어 '우리 국민'이라고 확인해주지 않는 한, 개인은 끈 떨어진 외톨이일 따름이다. 결국 신분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각기 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관청들이 합심해서 인증해준 공권력, 이게 바로 우리 신분의 주인이다. - 『너는 누구냐? :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357쪽.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것이 '전자주민증'의 법률적 근거이다. 법안은 지난 7월 8일 입법예고되었다가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한다. 전자주민증이 공청회 한번 없이 초스피드로 통과될 위기인 것이다.

전자주민증을 "돌아왔다"고 표현한 까닭은 이렇다. 이 신분증은 과거 정부가 도입하려다 포

기하고 공식적으로 "백지화"한 사업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 하 내무부는 ①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제출이나 신분확인을 손쉽게 하여 생활 편리 ②각종 증명발급건수 감소로 경비 절감 ③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인감 등 7개 분야 42개 정보를 통합 수록하는 내용의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크게 일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거친 끝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 집중된 정보는 또한 쉽게 복제되고 유출된다.
사진은 현금인출기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복제기(skimmer)를 제거하는 모습.

당시 반대운동이 계속되었던 이유는 전자주민카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때문이었다. 전자주민증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IC 카드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IC 카드 신분증의 도입은 신분증 안에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하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거나 통신망을 흘러다니다 보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특히 3,500만개의 전자주민증과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기초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전자주민카드 반대자들의 주장이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도입 예정인 전자주민증 역시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신분증

신분증명제도란 무엇일까? 평생 맺는 인간관계가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이루어지던 옛날에는 내 얼굴 자체가 나였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인구 이동의 범위가 늘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문서로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늘었다. 즉, 신분증은 본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발급받는 '특권'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근대 국민국가가 발달하고 인구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신분증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로 변신하였다. 국가는 점점 더 많은 국민에게 신분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국민 등록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는 자신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주체가 되었다. 근대 경찰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었다.

"훌륭하게 정비된 경찰 제도의 주목표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은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경찰관이 그 신분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각자 늘 신분증(여권)을 소지하는 것이다." - 피히테, 1796

오늘날 국가의 신분확인 요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간첩이나 테러범 색출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멀리 갈 것 없이 당분간은 11월에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신분확인 요구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신분확인 요구를 보다 수월히 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끝없는 신분확인 은 '사회 안전'을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 안전에 잠재적으로 위협하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과정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최근 국가의 신분확인 강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납세와 복지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국가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신분등록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경찰국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자주민증은 이러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전자신분증과 인권

지금까지 신분증의 역사는 수기 발급과 육안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발급과 육안 확인 모두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 순간 이 지점을 통과하기에 혹은 어떤 일을 하기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이다. 물론 국가는 신분증을 단순하게 발급하는 데에서 끝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하고자 했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 혹은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지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육안 확인과 수기 기록은 그러한 권력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전자신분증의 도입은 이제 권력의 의지가 완벽하게 반영되는 기술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완벽한 추적 기술의 등장이다. 전자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기록이 집적되고, 공유되고, 검색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기록되고 손쉽게 추적될 것이다. 완벽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였으니 고유성 식별에 대한 강박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사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문 등 고유한 신체 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확인되기 시작한다. 언젠가는 DNA 등 나의 내부를 직접 확인하는 신분증도 등장할 것이다. 전자신분증은 괴물처럼 정보를 먹으며 더욱 거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가장 큰 문제 역시 통합신분증으로서의 우려이다.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 갖가지 신분증이 전자주민증과 연계될 것이다.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의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수록하지 않더라도 연계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별하여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통합정보나 식별키 없이도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인식만을 통해 통합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우리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나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전자신분증을 굽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도 실명을 재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계속 굽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굽는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집적되고 관리될 것이다. 그 정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나 건강보험 등 필요한 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찰 역시 주요한 수요자가 될 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권력 기관을 위하여 전자 신분확인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그것은 진짜 전자감시사회이다.



▲ 2008년 촛불시위에서 시민을 짓밟는 경찰.
이런 경찰이 정보인권을 짓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모든 신분증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주민증은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전자주민증의 전제인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인권침해적이기 때문이다. 출생당시 부여되어 평생 변치 않는 주민등록번호, 17살에 강제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 그리고 국민이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단지 표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제도의 인권침해를 확대재생산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전자적으로 확인되고 온라인으로 전송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증을 끊을 때 그 주인은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전송되는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전자주민증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보면 지금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닥친 재앙이 전자주민증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전자주민증의 정보가 인터넷을 떠돌 날도 멀지 않았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의 보안 기술이 유출이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가 늘고 이를 위한 암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늘어가는 신분확인 요구만큼 그에 대한 수요 역시 비례해서 늘어갈 것이다. 그 앞에서 어떤 기술도 완벽할 수 없다. 개인정보는 전자주민증에서도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 그 날에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더이상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의 권리가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다.

신분 확인 강박사회가 오고 있다

일찌기 일망감시탑, 즉 <판옵티콘>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1748~1832)은 완벽한 신분확인 사회를 꿈꾸었다. 그는 18세기 말에 당시 작명 풍속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도대체 그 수많은 스미스와 존을 어떻게 서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벤담은 완전히 새로운 작명법을 제안한다. 개인마다 도저히 혼동할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하고도 유일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름과 생년월일과 출생지만으로도 신분확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자는 주장이다. 더구나 그 이름을 손목에 문신처럼 새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름을 몸에도가 것처럼 확실하게 묶어두면 새로운 도덕의 봄이 도래해서 법치가 바로 서며, 그 많은 악행들도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벤담은 눈에서 빛을 뿜어냈다(그뢰브너 : 331).

벤담의 망상일 뿐인가? 신체의 일부를 내장하는 신분증을 넘어서서 신분증 자체를 신체에 आरो새기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은 나만의 것인가? 전자주민증은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의 겨우 서막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전자주민증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 [인권오름] 제221호에 기고한 글입니다.³

3 <http://hr-oreum.net/article.php?id=1572>

기지국 수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나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기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기지국 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지국 수사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될 경우,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수사를 전개하는 기법입니다.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확인을 위해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허가서 1개에는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수집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올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문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지만, 전화번호 수는 2159만 8713건으로 7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통화내역 열람 건수 중 98.7%에 해당하는 2131만 건이 기지국 수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의 기지국 수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지국 수사 기법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경찰은 지금까지 어떤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31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최종별, 통신시점별, 기지국별 통계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해봤지만 비공개한다는 답변밖에는 받지 못했는데요. 자료가 부존재 하다는 곳도 있고, 혹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수사업무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하네요. 수사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못한다나요? 단지 통계일 뿐인데 말입니다. 경찰 측의 주장대로 무작위로 가져다 쓰고 어떠한 통계자료도 없다면 기지국 수사라는 기법은 무책임하고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지난 4월 5일 열린 시민단체의 감청실태보고 기자회견

범죄자를 잡기 위한 수사기법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구요?

첫째, 기지국 수사는 범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더라도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신의 통신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단순 전화번호자료만 제공받아 중복번호 등을 선별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사기법은 여러 군데 기지국에서 시간대별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는 경찰이 예측한 범죄자의 동선과 당신의 동선이 일치한다면 당신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단순 전화번호자료라고 하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당신의 전화번호, 어느 시간 누구와 통화를 얼마간 했는지, 당신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병헌 의원은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 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이 수사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통신사실 확인제공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요청권 남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지국 수사로 살인범만을 수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면 기지국 수사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지 않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사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고 법원의 허가서를 받는 것인데 나중에 법원에서 허가 받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찰의 편의로 오남용 될 요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셋째, 통신비밀보호법 13조3항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지 할 대상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가 수사를 위해 수집되었지만 그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어겨도 고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통지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히 위반인데 말이지요.

이와 같이 기지국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보호, 사생활 보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만 잡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다 용서 되는 건가요?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어마한 수의 국민들의 정보를 가져갔다면 책임지고 설명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기지국 수사는 인권침해와 상관없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투명하게 기지국 수사의 실태에 대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미디어스]에 실린 글입니다.⁴

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2>

젊은 해적, 아멜리아가 던진 질문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개인적으로 해적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적당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 독일의 활동가들과 독일 해적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였는데, 이 협정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활동에 해적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서명 목록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적당 인사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적당 초청이 현실화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방한하였다. (원래는 17일 오전 도착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업의 여파로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초청 행사의 개요는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별 초청 행사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CC Korea, 인터넷 주인찾기,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및 고려대학교 법대 등 다양한 단위에서 주최를 하였지만, 아멜리아의 초청 주최는 <우리도 해적이다>이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단체들의 연대체도 아니고, 아직 대표나 회원 등

을 갖는 조직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적당 설립을 목표로 하는 준비모임도 아니다. 아직은 그저 해적당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다. 사실 이 정도가 해적당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논의 수준이다. 해적당 준비모임이 만들어지고, 아멜리아의 방문에 맞춰 해적당(준) 이라도 발족했다면 좀 더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번 행사를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계기도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해적당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해적당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초청은 국내에서 해적당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 <http://pirateparty.kr>

젊은/좌파/여성/해적/의원인 아멜리아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나이인 (한국나이로) 24살. 방문 첫날, 행사를 치르고 난 뒤풀이에서 홍대 거리를 걸으며 에반게리온 주제가인 '잔혹한 천사의 테제'를 읊조리거나, 아무 일정이 없던 21일에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며 데이트를 한다고 좋아하는 등 그 또래의 발랄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노련한 국회의원(남경필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당당하게 한EU FTA의 문제점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통상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함도 보여주었다. 또한, 한EU FTA를 비롯하여, 주요 EU 지침(Directive)의 내용에 대해서 문구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해적당이 저작권 정책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자단체들이 불법복제자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해적'이라는 단어를 당의 이름으로 채택한 것으로 봐도, 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고, 이번 방한 행사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 것이었다. 스웨덴 해적당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둔, 해적당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5년으로의 단축, P2P를 포함한 비영리적 파일 공유의 허용, 디지털권리관리(DRM)의 제한 등 현행 저작권법의 근본적 개혁이었다. 특히는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 저작권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아멜리아의 입장은 더욱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저작권은 죽었다"고 단언했다. 현재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아멜리아만의 생각은 아닌 듯하다. 아멜리아에 따르면, 스웨덴 해적당 내에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당원들 간에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해적당이 설립될 당시에는 저작권 폐지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와 같은 정도로 입장이 정리되었는데, 현재는 저작권에 대해 (최소한 온라인에서는) 폐지의 입장이 많다고 한다.

물론 '저작권은 이미 죽었다'는 판단이든, 저작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국 해적당의 정책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입장은 전세계 해적당 전체의 통일된 입장이라기보다는 스웨덴 해적당의 입장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보기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작권의 칼날이 여전히 이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갈수록 권리를 강화해나가는 권리자단체나 정부의 강고한 자세를 볼 때, '저작권이 정말 죽었는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이 폐지되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멜리아의 답변은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과 같은 유럽에서의 몇 가지 대안적 수익구조 사례를 들었는데, 그리 설득력 있게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하다. 물론 그녀도 인정했다시피, 대안적인 수익구조의 문제는 그녀의 주된 관심사나 전문분야는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대안적 수익구조의 사례도 많은 스웨덴(유럽) 상황과 달리, 자신의 생계와 지속가능한 창작의 조건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굶어죽거나 창작을 포기해야 하는, 그리고 대안적 수익모델에 대한 실험도 거의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저작권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



▲ 최문순의원실 주최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 토크쇼에서 발언중인 아멜리아

'대안'에 대한 고민은 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포함한다. 아멜리아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의 하나는 "(저작권을 폐지하면) <아바타>와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겠는가?"였다. 이에 대한 아멜리아의 답변은, 저작권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 시스템으로서 가장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 <아바타>의 대중적 인 성공이 저작권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바타>와 같이 거대 자본이 투입된 영화가 전 세계 시장과 시민들의 관심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화들이 보다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시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진 조건은 무엇이 있었을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당이 만들어졌는가? 왜 굳이 당운동의 방식을 선택했는가? 등이었

다. 스웨덴에서는 2006년 해적당 설립 이전, 2003~4년부터 <해적 사무국(Piratbyrå, The bureau of Pirate)>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이를 통해 '해적에 대한 단속(anti-pirate)' 행위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활동이 생성되어 왔다. <해적 사무국>은 법률보다는 기술, 사회, 문화적인 분석과 비판이 중심이었던 듯하다. 이들 중 일부가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이릿 베이(The Pirate Bay)>를 만들었다. 2006년 이후 <파이릿 베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재판이 해적당의 성장에 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해적당이 설립되기 전 해인 2005년에는 파일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가 되었고, 결국 이 활동이 해적당에 대한 설립으로 이어진 듯하다. (아멜리아가 스웨덴 해적당이 설립된 2006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녀도 2006년부터 스웨덴 해적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적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계기들이 있었다. 1999년부터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운동을 벌여왔었고, 2000년대 초반에 소리바다가 큰 이슈가 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다. 주요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올려놓은 배경음악과 동영상, 사진들을 삭제하느라 네티즌들은 큰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왜 한국에서는 해적당을 설립할만한 토양이 왜 이리 척박한가? 사회적인 토양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정보공유 운동은 저작권에 대한 대항/대안 담론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스웨덴에서 P2P 파일 공유에 대한 금지는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으로 인식되었다. 해적당은 이를 '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로 정치화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정보공유 운동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자연스러운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지 못했다. 이는 단지 선전, 선동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이를 정보사회의 정보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고 설득력 있는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입장은 정보사회에서 정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에 대한 비전, 즉 특정 권력에 의한 정보의 통제에 반대하며, 좀 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전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해적당에 대한 해적당의 정책이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시민적 권리, 망 중립성 등의 통신정책에 대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보사회의 제반 이슈들을 포괄하고자 했으나, 이는 인권적 차원의 개념일 뿐 정보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 이슈를 인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굳이 '당' 운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멜리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적당이 '센세이셔널리즘'이나 '포퓰리즘'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녀의 주장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물론 한국적 환경에서, 즉 정당의 설립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매우 힘든 선거 시스템을 가진 상황에서 당 운동이 효과적인가라는 것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비록 올해 스웨덴 총선에서 스웨덴 해적당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9월 18일 스웨덴 총선에서 해적당은 1% 정도를 득표하여 원내 진입에 실패하였다), 아멜리아는 해적당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물론 해적당 정치인이 자신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겠지만) 녹색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10년 정도가 걸린 반면, 자신들은 훨씬 빠르게 정당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해적당이 설립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해적당 운동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결국 그들이 만들고 있는 변화가 우리와 무관할 수 없을 테니까.

* [미디어스]에 실린 글입니다.⁵

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7>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니 인기 영화배우와 가수, 무림고수가 나오는 만화, 영화가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라는 공익(?) 광고가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익광고협회가 제작한 광고이다. 저작권자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가 '공익' 광고로 포장되어 나오고, 음반협회나 영화협회가 아니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작한 것을 보면, 이미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운로드'는 불법이라는 고정 관념은 상당히 보편화된 듯 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른 저작권자들의 '이데올로기' 유포에 불과하다.

우선 어떤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과 다운로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저작물을 게시판, 웹하드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전송이라고 한다. 반면, 다운로드는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정부의 저작권 규제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전송, 즉 전송권 침해를 막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포털이나 웹하드, P2P 업체를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이용자에 대한 고소, 고발도 업로드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복제 역시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나, 사적인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국내 저작권법에서도 공정이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제30조는 아래와 같이 소위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8시에 하는 드라마를 퇴근 후 10시에 보기 위해서 녹화를 해두거나, 두꺼운 교재의 일부를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CD에 담긴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로 듣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이 감상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 역시 '사적복제'이다. 이와 같은 사적복제 조항을 둔 것은 비영리적이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개인적 이용을 위해서까지 권리자의 허락을 맡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거래비용이 더욱 커지게 되어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적인 이용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논란이 될만한 판결이 나왔다. 2008년 8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복제한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에는 사적복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그러나 이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법에 이를 불법화할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제된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적복제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아예 '불법 다운로드'를 명문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지난 2010년 2월 19일,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제한적이나마 인정되고 있던 공정이용의 영역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과연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이 조항은 규제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거나, 혹은 향후에 개인의 사적 공간까지 감시하겠다는 의도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의 범죄자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작권, 창작의 무덤

정리하자면,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업로드는 불법이지만, 다운로드하는 합법이다. 그러나 이는 업로드를 불법화하는 현행 저작권법이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

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상호 소통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창작을 저해함으로써 오히려 문화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앞서 '업로드'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예컨대 영화 <해운대> 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를 요구당한 사례가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다행히 1심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고, 피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게시물 삭제에 대해 용감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 블로거와 달리, 권리자단체의 묻지마 삭제 요구에 울며겨자먹기로 삭제당한 글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황당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KBS의 인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팬 카페에 올려진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KBS가 삭제 요구를 한 바 있다. 올해 3월부터는 SBS의 방송프로그램 캡처화면이 포함된 블로그 포스팅이 블라인드(차단) 처리됨으로써, 인터넷에서 SBS 관련 포스팅이 사라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드라마 팬카페나 블로그 포스팅이 방송 프로그램의 홍보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면 방송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호 소통의 권리가 제약된 것이나 다름없다. 온라인 팬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친구들과 인기 드라마에 대해 수다를 떠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사회에 공개된 저작물은 시민들간의 문화적인 소통에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소통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했지만, 이는 저작권이 '남용'되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제 이용자들은 문화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영리 라디오 방송, 사회 단체들의 뉴스 아카이브 서비스, 재기발랄한 네티즌들의 패러디 동영상, 전문가 빠치는 문화 비평 블로거들 등. 그러나 이러한 이들이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 때,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거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비영리적 문화창작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재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인터넷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주인찾기> 모임의 두번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제목이 '저작권, 창작의 무덤'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ournet.kr> 을 참고.)

문화적 측면에서 저작권 체제는 생산자/소비자의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한다. 소비자는 문화창작자들이 생산한 저작물을 소비해주는 객체일 뿐이다. 특히, 거대 영화사, 음반사 등의 미디어 기업들은 어떠한 저작물을 생산할지, 유통할지를 통제한다. 예컨대,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없는 문화 생산물을 더이상 유통되기 힘들다. 그들에게 시민들은 자기들의 저작물을 구매해주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해적들'로 구분될 뿐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허용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르다. 소비자(수용자)는 더이상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지 않으며, 기존의 창작물은 수용자들의 참여 속에서 또 다른 창작물의 재료로 이용된다. 비록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일지라도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의미있는 저작물일 수 있으며, 더 대중적인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음반사와 같은 중간 매개자가 아니라, 수용자'들'에 의해서이다.

대안적인 수익구조

물론 저작권 체제는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생산 시스템과 함께 존재한다. 즉, 저작권 체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문화산업의 노동자와 전업 창작자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작권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전업) 창작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업 모델이 이미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원은 자유롭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공연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은 전통적인 수익구조의 하나이다. 혹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다양한 방식의 자발적인 후원구조를 연결시키는 사업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전업 창작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지원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복지 인프라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출판, 음반, 영화 등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적 수익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 체제가 지나치게 (사실상 거대 문화자본이 주류인)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작권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허용,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 등이 그러한 개혁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해적이다

지난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가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pirateparty.kr> 참고) 스웨덴 해적당은 2006년 1월 1일 설립되어,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득표하여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스웨덴 해적당 설립 이후 전 세계에 해적당 바람이 불고 이쓰는데, 현재 16개국에서 정당으로 모습을 갖췄으며, 32개국에서 준비 모임이 구성되었거나 논의 중이다. 스웨덴 해적당이 설립된 것은 '다운로드'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터인데, 세계 최대의 비트토렌트(P2P 방식)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전송 규약, 혹은 소프트웨어) 검색 사이트인 파이릿베이(The Pirate Bay, <http://thepiratebay.org/>) 가 경찰에 의해 침탈 당하면서 해적당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스웨덴 젊은층들에게 파일 공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파일 공유의 불법화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경제적 이기심의 표출이 아니었다. 해적당은 이를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유통이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 정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들은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해적'은 권리자 단체들이 '복제를 범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해적당은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닌가?

* 이 글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47호 에 기고한 글입니다.⁶

6 http://www.esaram.org/2008/webbs/view.php?board=esaram_43&id=79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문화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인터넷은 어떤 매체보다 자유롭고 참여적인 공간이며 정보의 유통수준은 가히 경이롭다 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때로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잘못된 인터넷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인터넷실명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그 범주에 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표현의 분출구로 삼는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권력에 대항하는 생각, 의견, 주장을 외부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중요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 제 21조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기도 하는데 그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가령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며 별명을 붙이거나 풍자하는 것이 인격권의 침해라면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위험이 따른다. 사적인 개인의 명예가 저질스럽고 거짓된 정보로 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인격권은 상대의 표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대상과 사안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해석될 수 있다.

공인과 사인, 공적인 사안과 사적인 사안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경우 표현의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사인의 사적 사안의 경우 프라이버시권, 인격권과 충돌할 위험소지가 크기에 보다 좁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타블로의 경우 어디에 해당할까?

연예인은 대중적 영향이 크고 스스로 신상정보를 열어놓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개인보다 크기에 공인으로 볼 수 있다. 타블로가 학력 마케팅으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블로의 학력 문제는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타블로의 학력이 우리 사회에 직접적이거나 중대하게 끼치는 공공의 해악은 없기에 공인의 사적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공인이라 할지라도 정치인, 공직자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연예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수위는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 합니다(타진요)' 회원들의 행동을 마치 의혹 제기의 중심인 운영자 '왓비컴즈'의 추종자, 사이버종교와 같은 이치로 보는 여론이 있다. '타진요' 회원들의 행동을 개인들의 정신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폭 넓고 다양하게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학력의혹 시작의 이면 '학벌주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십거리가 떠돌고 있다. 그 중 특정 가십거리는 의혹으로 키워지고 확대되는데 왜 하필 타블로의 학력논란이 가십거리에서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확대되었을까? 타블로 학력의혹 제기가 단순 가십거리에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의 이면에는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타진요 회원들은 '스탠포드 석사를 3년 반 만에 마친 사람이 한국에서 힙합가수를 하겠느냐' '스탠포드를 졸업할 만큼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스탠포드를 석사까지 3년 반 만에 마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이와 같은 표현들은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학력 콤플렉스가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보여주며 학력에 대한 편견은 학력의혹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타블로 학력 의혹 제기는 정당한가?

경찰의 조사 결과 타블로의 학력은 진실로 밝혀졌다. 만약 조사 결과 타블로의 학력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타블로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학력 의혹은 정당화되고 '타진요' 회원들은 영웅이 되었을지 모른다. '진실성'은 정당성에 상당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진실성이 이전의 모든 행위나 표현들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와 의견개진은 정당화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 의혹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단순 비난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타블로의 언행이 많은 이들의 학력 조작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면 학력 의혹을 제기 한 것 자체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3) 추적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발적 감시사회

의혹제기 과정에서 사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는 타블로의 가족의 신상 털기는 가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연결된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부터 음모설과 여러 가지 의혹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의견 개진, 집단적 추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고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상의 집단적 추적 활동은 상당한 근거와 정보를 가지고 국가권력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매개로 정의감을 불태워 집단적 추적을 통해 개인을 심판하는 가혹한 처벌이 일어나기도 한다.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은 비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퍼트리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야기한다. 문제는 추적과정에서 까발려진 개인정보가 인터넷의 정보보존력과 전파력과 더해지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한 핵심은 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이버에서 뭉친 개인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개인을 사찰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가에 의한 감시사회와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에 의한 감시사회가 일반화 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무차별적인 감시를 불러올 것이다.

4) 공권력에 대한 불신

'타진요' 회원들이 큰 비난을 받고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광기어린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독재정권 아래에서 경찰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탄압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고 2008년 촛불 이후 인터넷에서 공권력에 의한 탄압 사례들이 쏟아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타블로의 학력 조작 의혹이 공권력이 밝힌 사실에 끝까지 대항할 만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안인가? 우리는 진실탐구의 가치를 생각해봐야 한다. 타블로의 학력 논란 사건에서 남는 것은 타블로 개인의 괴로움밖에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 마녀사냥, 악플에 '인터넷실명제'가 답인가?

학력 의혹 제기가 시작되면서 타블로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MBC 스페셜에서 타블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아바타가 된 기분이다"라고 표현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왜 악플이 난무하는 것일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느슨하고 밀착력이 없다. 특히 연예인은 수많은 악플의 대상이 되는데 그들은 삶의 오락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인물로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대상이 된다.

인터넷 악플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으켰던 개똥녀 사건, 최진실 사건, 타블로 학력논란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핵심적 이유는 범죄예방과 본인이 추적가능하다는 의식으로 네티즌들의 책임감을 불러일으켜 악플이 제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최진실 사건' '타블로 사건' 등은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현재 일일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사이트에서는 글을 쓸 때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방지와 범죄예방은 이미 그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현재 사실상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포털 등에서 도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악플이 줄었다고 할 만한 근거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예방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타블로 사건의 경우에도 타진요의 운영자 '왓비컴즈'는 실제 명의 도용을 해서 활동을 해왔다.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의 제한으로 의견개진에 위축효과만 낳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오는 필수 요소이다. 익명이기에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온라인에 털어놓기도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나 국가가 강제해서 시행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국가의 강제 하에 모든 글에 신원정보를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글이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실질적 내용규제가 되며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의사표현에 위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법적 규제와 인권교육, 자발적인 네티즌 운동!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언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람을 모욕했을 때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모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권력층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오남용 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가 부정적인 기능을 더 많이 한다면 인터넷 악플 방지의 대안은 무엇일까?

법적 제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최소한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현재 일간지나 방송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하고 있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문제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중재되어야 한다.

둘째,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벌중심 체제를 낳았고 이는 타블로 사건의 숨은 원흉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 과목은 인권적 감수성을 키우거나 사회구성원들을 깊고 다양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로지 시험지 답안을 맞추기 위해 배우는 과목 중 하나, 또는 입시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눈에 보이는 않지만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하는 방법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인터넷 악플 문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악플 방지 운동'을 해나간다면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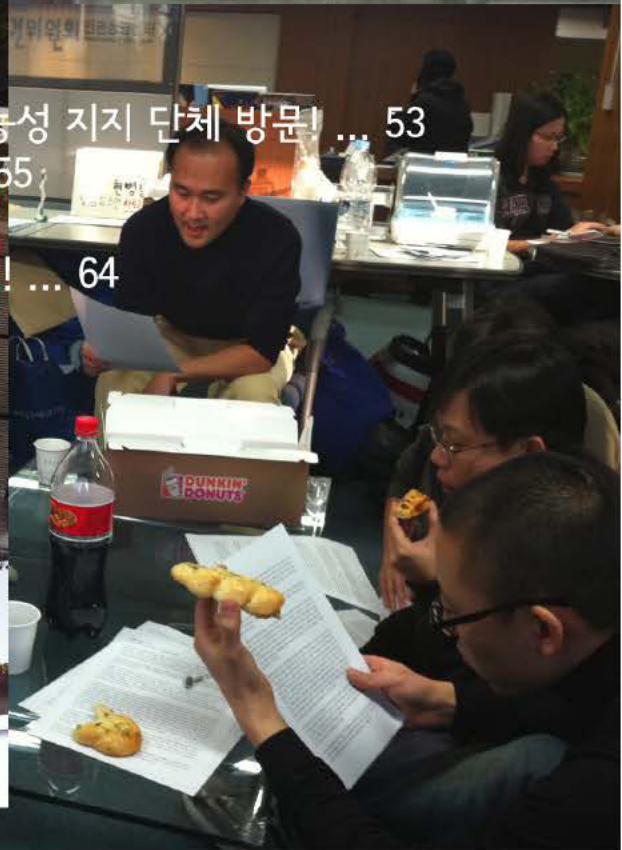
* 경희대학교 교지 고향에 실린 글입니다.



Section 011.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지지 단체 방문! ... 53
 진보넷 후원의 밤, 참 잘 했어요 ... 55
 2011년 운동 달력 사세요 ... 61
 미세마을에서 온, 고민 많은 고구마!! ... 64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지지 단체 방문!

무자격자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언제까지 빼팅길래~~



무자격자 현병철 때문에 인권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인권단체들이 위원장 현병철이야말로 사퇴하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권위 점거 농성도 들어갔구요. 여기에 뽕송뽕송한 우리 상근자 민경씨가 결합해서 매일 거길로 출근하고 있어요. 진보넷 사무실엔 오지도 않음 〇〇 ㅋㅋㅋㅋ 지금은 따듯한 사무실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1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세미나를 인권위 농성장에 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세
를 보여주고 그러는 거라네요?! 괜히 당시의 사진을 첨부해 봅니다.




아무 의미없는 사진들 -스-

사진 사이즈를 줄여서 첨부하려다 보니 아무 의미가 없길래...;;; ㅋㅋㅋㅋ 뭐 이런 분위
기에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진보넷 후원의 밤, 참 잘 했어요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이 바꾼 세상”

2010 진보네트워크센터후원의밤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난 19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1만 발기인운동을 시작 할 당시의 구호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변함없이 진보넷은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Progressive Network Center

후원계좌: 기업은행, 057-036794-04-019 진보네트워크참세상

지난 11월 23일 2010년도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의 밤에 와주신 모든 활동가 블로거 노동자 기타 재야인사분들;;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몰라서 언급을 못 해도 일일이 다 고마웠어요!! 그럼 간단하게 그날 스케치를 해 볼까요?!



이종희라고 2009년에는 용산 집행위원장으로 순천향 병원에, 서울 구치소에서 지내다가 올해 다시 출근을 하는 등 마는 등 이번 주에도 안 나오신 진보넷 대표가 인사 중이십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맹세하고 계시네요 후후후 앞으로 투쟁의 현장 말고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있지만 오늘 법원 판결에서 실형 4년을 구형했네요 아이코... 이 나쁜 놈들... 집행유예로 잘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ㅁ; 아니, 승리해서 대법원이 무죄 선고하기를!!!! 무죄!! 무죄!!!!

진보넷 후원의 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 살펴 볼게요~



진보교육연구소 박유리 활동가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 발의를 위해 서울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 서울시민들의 협조를 바래요.⁷

7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자료집(2010.10.18) <http://jinboedu.jinbo.net/bbs/zboard.php?id=pds&no=2488>

인권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병철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활동가입니다. 실제로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시죠?? 사랑방 쪽은 사업이 많이 분화되어서 잘 모르겠구...;;



발레오공조 한국 지부 부지회장 박철수 님 :

요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계신데요ㄱㄱ 삼성르노 자동차에 부품을 대는 프랑스 발레오 자본이 수년간의 흑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위장폐업하고 프랑스로 날르면서 발레오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같은 시간에 촛불집회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해요ㄱㄱ 빨리 승리하시길!!!!

발레오공조의 투쟁 소식을 읽으세요⁸



8 발레오공조 블로그 <http://blog.jinbo.net/Rhapsody>

축하공연하러 와주신 회기동 단편선⁹님. 두리반에서 보였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노래 되게 좋았어요!! 까마귀떼, 오늘 나는¹⁰, 동행 세 곡을 불러주셨어요. 진보넷 블로거라고 조용히 소개하셨는데 이글루로 이사하셨잖아요! ㅋㅋㅋㅋ

그런데 왜 어린이가 난입?!



썩!! 진보넷 행사에 내가 빠질 순 없지~~ 6살 오진경 어린이입니다 >스<



11월 25일 목요일에 있을 청소년 활동가 활동기반 마련 후원의 밤을 광고하러 오신 정열님!!

9 <http://danpyunsun.egloos.com/>

10 <http://www.youtube.com/watch?v=SMFT3kt7lz8>

활동하러 다니려고 해도 차비도 잘 없다는 그 분들;ㅁ;에게 오늘 못 와도 따뜻한 연대의 돈을 건네 주세요!! ☎ 110-298-691797 신한은행 김동균

짱열님은 진보넷 자원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조만간 자주 볼 듯?! ㅋㅋ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위원장 미셀님이 군부 독재 시절 마냥 인권이 후퇴한 한국을 질타하고 이주노조 운동, 크게 노동 운동에 진보넷이 함께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덕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즉석에서 급하게 섭외된 통역자 아즈님께도 감사드려요!!

이마만큼 쓰고나니 더이상의 스케치는 힘드네요 호호호 각자 슬드시는 사진을 찍은 게 몇 점 있지만 실어 무엇하리...;;; 다만 이 후기를 작성하는 작자가 블로그 운영자인 관계로 블로거들께 특별히 감사드릴게요.

진보블로거 감비, 나비(인디보), 니나, 마리신, 산오리, 새벽길, 송, 스머프, 스캔플리즈, 요그, 지각생(ㄱㄴㄷ 순 ㅋㅋ) 그리고 위에 이미 언급한 짱열, 아즈 와주셔서 행복아요 또 만나요!!!! (저랑 인사한 진보블로거 중에 빠뜨린 분은 없겠져 설마... =ㅅ=)

2011년 운동 달력 사세요

연대와 투쟁의 일정과 기억해야만 하는 날들이 적힌 2011년 운동 달력 사세요~!!



탁상 달력입니다. 한 개 5천원이에요.

투쟁하는 날들이 담겨 있어요

96-97 총파업 첫날, 대추리, 도두리 강제집행 5년, 용산 학살 2년.. 일반 달력에 뭐 그런 게 담겨 있나요? 잊을 수 없는 투쟁의 순간들, 잊어선 안 되는 연대의 날들을 담아냈어요.

혹시 운동 달력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날짜가 있나요?! 그렇다면 truesig(at)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내년, 내후년 달력에 넣을게요.(다만 열사 달력과 중복, 기타 이유로 전태일님 외의 열사분들이 돌아가신 날짜는 넣지 않았어요)

투쟁하는 사진들을 담았어요

기념일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적인 투쟁의 순간들을 담은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는 달력!

올해 결국 승리한 기름 투쟁 사진도 있고, 결국 빼앗기고 만 대추리 사진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이주노동자 운동, 삼성 반도체 산재 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추모 행진,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 1년 가까이 철거 투쟁을 벌이는 두리반 등등 다양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후원해 주신 분들의 사진에 대한 코멘트도 담았구요!

이렇게 주문하세요!

입금 후 진보넷 사무실(02-774-4551)로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진보넷 블로그(<http://blog.jinbo.net/jinbonet/175>)에 비밀댓글로 수령자 이름/입금자 이름/수량/주소를 써주세요. (배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댓글을 삭제합니다)

기업은행 057-036794-04-041 진보네트워크

우편 주문시

* 1부 6000원

* 2부 이상 : 개당 5천원으로 계산

일반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등기, 택배를 원하실 경우 배송료 2000원을 더해서 입금해주세요. (일반 배송 잘 갑니다. 배송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우편함에서 누군가 훔쳐가는 일도 가끔 있다네요;)

진보넷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달려도 사고 같이 놀기도 해요!! 직수령 시 개당 5천원!
(+ 미리 전화하고 안 오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매월 투쟁 달력들이 월페이퍼(컴퓨터 바탕화면 그림)로 <http://blog.jinbo.net/jinbone>
에서 제공됩니다. 이진 무료!!<

오프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

서울

@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강남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7-19번지 02)542-4004 <http://blog.jinbo.net/ssong/290>

@ 레드북스

서울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2층) <http://redbooks.co.kr>

@ 한 잔의 룰루랄라

홍대역 4번 출구 롯데시네마 옆 <http://twitter.com/ruloorala>

+ 가끔씩 진보넷도 달려 팔러 투쟁하러 투쟁의 공간 어딘가에 출몰할 예정입니다-스-

수원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원역에서 2년째 진행중인 수원 수요 촛불!

판매 대행으로 진보넷을 후원해 주시는 이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TTTT

오프라인에서 판매 대행해 주실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2-7744-551

해외동포를 위한 판매 안내

해외동포에게도 달력을 팝니다. 배송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니 주소와 부수를 알려주시면 계산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달력을 무상으로 나눠드렸으나 올해 재정이 위태위태하여 부득이하게 재정사업으로 달력을 팔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팽팽해지면 내년에는 다시 무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저렴하고 뜻깊은 진보넷 운동달력으로 선물 많이 하시구요 원하시면 예쁜 손글씨로 선물 발송 메세지도 써드립니다! 아울러 진보넷 회원가입/이미 가입하셨으면 주변인들 강제 가입¹¹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력 사세요~!!

11 <http://center.jinbo.net/member/regist.php>

미세마을에서 온, 고민 많은 고구마!!



전라도 미세마을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고구마를 보내주셨어요!!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고 있길 '스' 키키키키 더 많은 사람이 먹었으나 처음 모인 사람만 사진에 나왔네용

귀여운 박스에 담겨온 고구마와 당근!! 받자마자 고구마를 삶아서 노나먹고, 또 더 삶아서 진보넷 사무실 근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투쟁 중인 발레오 노동조합에도 갖다 드렸어요!!!! 따뜻한 고구마 맛있게 드셨길>스<

미세 꾸러미 ☞ 명랑농부들의 일 놀이 배움 공간 미세 꾸러미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s-Space/W7eA/1>

발레오공조 노조 ☞ <http://blog.jinbo.net/Rhapsody>

이 고구마는 그냥 고구마가 아닙니다 고민 많은 고구마¹²에 요. 고구마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격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 걸까?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고민이 묻어난 고구마를 별 고민없이 허겁지겁 먹었네용 ;스;

맛좋은 고구마 고민 많은 고구마, 올해는 판매가 끝났지만-스- 미세마을의 미세 꾸러미를 읽어보시고, 매월 미세 마을을 잡춰보세요<

항상 후원해 주시는 미세마을 맛있어요!! 고마워요!!!!

12 <http://blog.jinbo.net/yougam/82>